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평등연대	<h1>보도자료</h1>	
	2024년 7월 9일(화)	조진영 노동안전보건차장 010-9913-92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추모 행동

“우리는 죽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중대재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 일시 : 2024년 7월 9일 (화) 저녁 7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진행 순서

-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차장 조진영)
- 추모 헌화 및 묵념
- 추모 발언1: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추모 발언2: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주용 조직부장
- 추모 발언3: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광본부 준비위원장(노조 부위원장, 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추모 발언4: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전수경 활동가
- 추모 공연: 이수진 문화일꾼
- 추모 발언5: 성공회용산나눔의집 강다영 활동가
- 추모 발언6: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 추모 발언7: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 마무리 및 행진 (서울노동청 출발 - 파이낸스센터 앞 마무리)

※ 첨부: 추모 발언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아리셀 공장 중대재해 화재참사로 생명을 잃은 모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여러 산업 현장에 필요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생명과 안전,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생명, 권리보다는 관리와 통제, 사업주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에서 더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노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사업주는 근본적인 안전대책과 권리보장 없이 이주노동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산업현장의 위험한 근로조건, 안전상황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부러먹기 위해 위험한 노동조건을 그냥 놔두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말하는 기계로만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면 사업주들은 너네 나라보다 몇 배의 임금을 주고 있으니 이걸로 다 보상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권리는 돈으로 비교해서도 안되고 바뀌도 안됩니다.

아리셀 리튬전지 회사 배터리 폭발 참사는 살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없고 안전규칙 따르지도 않았습니. 3만원 내지 않아서 안전보건 추가 컨설팅 받지 못한 아리셀이 3년동안 안전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안전보고 해서 운영된 사업장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산업현장에 만연한 위험 노동 상황입니다.

위험한 현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50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시설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안전교육을 모국어로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이주노동제도를 노동부가 관할해서 안전점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어 나가는 이주노동자 없도록 한국정부와 사업주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산재 대책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막아야 노동자가 죽지 않습니다.

작별인사를 할 새도 없이 가족과 세상과 이별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참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 세상에 알려진 ‘메탄올 실명’ 사고의 노동자들. 그들은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누구보다 애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천, 부평 공단 스마트폰 부품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알바몬, 사람인 같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본 20대 청년들이 인력사무소의 승합차에 실려 공장으로 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용돈을 벌러 온 평범한 청년, 부모를 만나려고 온 중국동포 청년, 학비를 벌러온 대학생 휴학생... 이런 이들이 인터넷을 보고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청년들이 부품을 세척하던 메탄올 용액에 중독되어 쓰러진 시간은 일을 시작한지 5일, 20일, 길어도 5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승합차로 사람을 내려놓고 간 이들에겐 수수료로 보일 뿐인 이들, 공장주의 눈에는 누가 오든 상관없이 그저 일당으로만 보이는 이들.

그렇기 때문에 유독물질인 메탄올이 맨손에 닿고 호흡기로 들어가고 온몸의 땀구멍으로 흡수될 때 사람의 몸에 어떤 해가 되는지 생각할 책임을 아무도 지지않는 노동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여느 알바처럼 부지런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이들이 순식간에 우리가 말하는 불법파견 노동자가 되어 시력을 잃은 사고가 2016년의 ‘메탄올 실명’ 사고입니다. 당시 노동건강연대가 만난 6명의 실명노동자들은 갑자기 쓰러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동안 공장 사장, 공장의 관리자, 인력업체의 사장, 아무도 연락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일하던 사람을 내일 다시 볼지 알 수 없기에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이 안 좋아지면 약국에서 약 사먹고 집에서 못 나와도 내 소식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탄올 실명’ 노동자들은 실명의 이유를 알기까지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려고 보니 노동자를 승합차에 태워 보낸 업체가 몇 개월 새 업체이름을 바꾸고 또 바꾸어 저희 활동가가 업체이름을 추적해서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6명의 실명 노동자를 찾아냈지만, 또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6명 청년의 실명이 있기 2년 전에 이미 반월 공단지역에서 메탄올에 실명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있었으며 당시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월공단에서 파견으로 일했던 그는 실명 후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공단의 불법파견이 얼마나 사람을 도구로 보는지, 노동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것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당시 책임이 있는 노동부장관 둘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 공단을 방문하여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하였기에 노동부는 그 방향으로 했고 2년 후 다시 6명의 노동자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메탄올 실명’ 사고 후 몇 년이 흘렀습니까. 공단의 사람장사는 더 왕성하게 퍼졌습니다. 공단마다 승합차에 사람이 실려 날라지고 인력업체들은 사무실도 없어도 주소지를 공장에 심어놓고

노동력을 댁니다. ‘메탄을 실명’ 당시에도 어떤 인력업체는 주소지가 공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단마다 더 세련된 기술로 법을 회피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기술이 퍼져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들, 취약한 이들,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이 점점 더 승합차로 실어 날라질 것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점점 나쁘게 만들고,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산재 대책을 내놓으면서 세상이 조용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재 대책을 내놓아도 불법파견은 이를 피해갈 것입니다. 애초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제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이 불법파견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이고 양적인 위험을 아무리 측정해도 안전관리 계획을 아무리 정교하게 세워도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불법파견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업의 숙원인 노동자 파견이 자유로운 생산현장을 만들어주고픈 정부의 의지를 기업과 인력업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배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화성 아리셀에서 돈 벌러 왔다가 리튬배터리 폭발로 무려 2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 산재 유족들 “다시는”은 어제 아리셀 피해자 유족들에게 도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저녁 추모제도 참석했습니다. 추모제에서 이주민 유족들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는 심정을 눈물을 쏟아내며 통곡하듯 말씀하는데 저도 아들이 생각나 정말로 가슴 아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 아픈 심정과 가정의 파탄을 넘어 피해자들 삶까지 좀먹는 듯한 아픔과 이 억울한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로서 진정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왜 내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알고자 합니다. 어떤 불법이 있었고 안전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공장 지을 때 불연재로 지을 수 없었는지, 비상시 어떤 조치를 교육받았고 위험성이 큰 리튬배터리 보관 관리가 적절했는지, 배터리 온도가 올라갈 때 터지지 못하도록 진압 방법은 적합했는지, 만약 터질 때 급박한 위험만큼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는지, 이전의 4차례씩이나 화재 발생에도 재발방지 대책은 사망사고를 막는데 부합했는지, 관련 노동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등 모든 궁금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의무 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 위반 시 꼭 처벌받게 해달라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자식을 잃고 환장해 미칠 지경에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벌한다고 죽은 가족이 돌아오진 못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살아보겠다고 돈 벌러 갔다가 갑작스런 이별로 인한 고통을 누구도 겪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리셀 참사가 일어나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유족협의회와 대책위를 갈라놓거나 추모제조차도 못하도록 방해에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유족들을 직계가족만 지원해주고 연관된 가족들의 지원을 당장 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지금 분양소 앞에 권리 침해에 대한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처럼 유족들이 서로 뭉치지 못하도록 분산을 유도해 빨리 사건을 덮을 심산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화성시는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화성시로부터 받는 2차 가해로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않도록 차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리셀 산재사망사고 수사의 중간 브리핑 발표에 합동수사본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불참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족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던 유가족 대책위의 참석이 어떻게 불참의 이유가 될수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아리셀 피해자와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되길 원하며 그 길을 위해 함께하는 시민들 모두 힘 보태주길 바랍니다.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이주인권 활동가 강다영

아리셀 화재 참사로 돌아가신 모든 희생자분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화재참사가 발생한 이틀 뒤였는데도, 아직 현장에서는 탄내가 강했습니다. 무너져 앉은 아리셀 건물과 참사 현장의 탄내는 이번 참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마음이 너무나 착잡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이번 참사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리셀 사업주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인건비를 줄이고 안전대책비용도 줄이고 고용에 따른 책임도 회피하고, 사업주의 이기심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미 네 차례의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도 안전교육도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을 더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 때문입니다. 하청의 하청, 형식적인 안전점검만 하는 공단, 그리고 위험의 이주화.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아리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피해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위험한 일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9.7%에서 11.2%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사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장들이 뺄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안녕을 걱정합니다. 아리셀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요구합니다.

하나. 위험의 이주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주노동자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 이번 참사 책임자에게 그 죄를 엄중히 물어 제대로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화재’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참사가 일어나게 된 사회구조의 문제를 주목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수정

23명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나 23명의 노동자가 죽고 8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일했습니다.

8일, 어제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2021년 2번, 2022년 1번, 이번 화재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1번 등 총 4번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3명의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기회가 4번이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경찰은, 그리고 노동부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화재사건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23명이 죽고 나서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입니까? 목숨이 두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쯤 죽어도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때, 두번째 사고가 났을때, 세번째 사고가 났을때, 그리고 네번째 사고가 났을때, 마땅히 해야 할 사건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은 경찰과 노동부가 죽었습니다.

23명의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아리셀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메이셀에서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리셀에 공급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지로 향하는 통근버스 사진만 문자로 보내줄 뿐, 근

로자들도 저나 저의 직원 전화번호만 알지 얼굴도 모른다.”, “우리는 아리셀에 직접 갈 수도 없다.” 사고 다음날인 6월 25일 메이셀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말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채 발견된 이후 우리는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에 의한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를 죽인다고, 불법을 저지른 원청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이것은 살인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결과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깊은 애도와 사죄를 한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애도하고 사죄는 하는데, 내가 잘 못한 것은 없다. 이런 말입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불법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안전장치 없이 부러 먹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죽인겁니다. 불법인지 알면서 노동자를 파견해 인건비 받아 먹고 산 메이셀 사장이 죽인겁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죽은 후에도 위법한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위험의 외주화를 용인하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23명의 노동자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직접생산공정이 아니어서 불법파견이 아닐수도 있다고 말한 중부고용노동청장 민길수, 당신들이 23명을 죽였고, 지금 이순간에도 불법을 용인하며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4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의 이주화가 되어 노동자의 목숨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죽으려고 오는 이주민은 없습니다. 노동자도 목숨은 하나입니다. 한번쯤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화성시는 4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여 불법파견이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의 이주화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더이상 죽지 않습니다.

세월호의 노란리본, 이태원참사의 보라색리본, 오송참사의 녹색리본에 이어 우리는 화성 이주노동자들의 하늘색 리본을 슬픈 마음으로 마주합니다. 더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시민들이 바다에서, 길에서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오늘 민주노총이 동지들과 함께 투쟁 하겠습니다.